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 소득, 고용, 정치 성향의 재검토*

이주호**

김윤태***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20차 ‘한국복지패널조사(2025) 복지 인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참여자의 복지 지출 확대 태도가 소득 계층, 고용 유형, 교육 수준, 정치 성향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9개 복지 지출 영역에 모두 응답한 경제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보조 회귀분석을 병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계층 가운데 상위층과 부정적 복지 태도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간층과 하위층에서는 긍정적 복지 태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복지 태도의 ‘재계급화’로 단정할 수 없고, 기존 ‘비계급성’ 논의 속에서도 소득 계층 요인이 다층적, 역동적 변화를 보여준다. 둘째, 고용 유형과 학력의 관련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지위와 복지 태도의 관계가 단순한 내부자와 외부자 구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셋째, 정치 성향

*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의견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2026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 이주호_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reezoe@korea.ac.kr), 주저자

*** 김윤태_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yunkim@korea.ac.kr), 교신저자

© Copyright 2026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정치 성향과 복지 태도의 일관된 관련성은 복지 태도의 높은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 정책이 특정 이념 진영의 의제로만 인식되는 대신 정책 목표와 재정 전망, 수혜 대상,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제시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복지 태도, 계급, 소득 수준, 고용 유형, 교육 수준, 정치 성향, 복지국가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복지 태도(welfare attitudes)는 복지국가 확대와 재정 부담, 재분배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관심을 끌었다. 2010년대 이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지지 기반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Kim & Yeo, 2015).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재난지원금,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취약계층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었고, 복지 태도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가 책임과 재정 부담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Kang & Shin, 2024). 특히 복지 확대가 단순한 정책 선호를 넘어 조세 부담, 재분배 원리, 국가 책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연결되면서, 복지 태도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다(Lee, 2009; Kim & Yeo, 2011; Byun & Ko, 2023).

복지 태도에 관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계급적 위치와 복지 태도의 관계이다. 다양한 정치사회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나 저소득층이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자본가 계급이나 고소득층은 제한적 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Rehm et al., 2012).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 태도가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Kim & Yeo, 2011). 반면 2012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중간계급의 복지 인식 변화와 복지 정치의 확대 속에서 복지 태도의 ‘계급화’ 또는 ‘재계급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Kim et al., 2013; Kim & Yeo, 2015; Kim, 2018).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에 따른 복지 지출에 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소득 계층은 가구 처분가

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분위로 측정하며,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고용 유형의 분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한다.¹⁾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과 같은 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학력)을 사회적 지위의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학력은 개인의 정보 접근성, 정책 이해 수준, 문화적 자원, 노동시장 위치와 연결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 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가치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복지 확대가 재정 부담과 수혜 대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과 연결될수록,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치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발포르스(Svallfors, 1997, 1999)는 복지 체제의 제도적 구조, 정치적 이념, 사회적 신뢰, 연대 의식 이 복지 태도 형성과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국내 선행연구 역시 정치 성향에 따른 복지 태도 차이를 보고했다(Lee, 2009). 이 연구는 정치 성향을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가치관 요인으로 검토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이해’(self interest) 요인은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었지만(Svallfors, 1997; Ahn et al., 2021), 이 연구에서는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를 측정하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 변수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은 복지

1) 고용 유형은 고용 안정성뿐 아니라 사회보장 접근성, 소득 안정성, 노동권 보장 수준과도 관련된다. OECD는 고용 유형을 전형적 노동과 비전형 노동으로 구분하며, 비전형 노동에 임시직, 시간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OECD, 2012).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학력은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정치 성향은 복지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계급), 교육(사회적 지위), 정치 성향(가치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025년 단일 시점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지 태도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계급 요인, 사회적 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이라는 세 차원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논의

‘복지 태도’는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 갖는 인식, 선호, 가치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복지제도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복지 태도는 단순히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넘어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된다.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는 복지 태도의 결정 요인을 계급, 사회적 지위, 가치관, 자기 이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Svallfors, 1997; Rehm et al., 2012; Byun & Ko, 2023).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계급은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복지국가 이론은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이나 저소득층이 재분배와 사회 보장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자본가 계급이나 고소득층은 조세 부담과 시장 원리를 이유로 제한적 복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Rehm et al., 2012). 이 연구에서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노동시장 지위, 고용 안정성 등 개인이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포괄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다만 이 연구는 계급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가구 처분가능소득에

따른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을 계급적 위치를 보여주는 경험적 지표로 활용한다.

한국에서 복지 태도 연구는 서구의 계급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0년대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 태도가 전통적 계급 구조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비계급성’과 동일 계층 안에서도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지적했다(Kim & Yeo, 2011). 특히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 확대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복지 태도 연구의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제도 경험의 부족, 제도에 대한 불신, 복지 정보의 부족, 정치적 동원의 취약성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Kim & Yeo, 2011; Yoon et al., 2019).

반면에 2010년대 이후 복지 정치의 환경은 변화했다.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중간계급이 복지의 수혜자이자 재정 기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복지 태도의 ‘계급화’ 가능성도 논의되었다(Kim et al., 2013; Kim & Yeo, 2015). 이후 불평등, 자산 격차, 공정성, 조세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면서 복지 태도는 단순한 소득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자산 보유, 조세 인식, 정치적 가치관과 결합된 문제로 확장되었다(Kim, 2018; Kim, 2023; Yoon & Lim, 2024).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사회적 위험의 불평등한 분포가 부각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위치와 정치적 해석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커졌다.

이 연구는 계급적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을 측정한다. 소득 계층은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분배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것처럼, 저소득층의 복지 지지가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 연구는 소득 계층에 따른 복지 태도의 차이가 단순 평균 비교에서

나타나는지뿐 아니라, 정치 성향 등 다른 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는 기존 ‘비계급성’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저소득층의 소극적인 복지 태도를 설명한다는 이론적 의미를 검토한다.

고용 유형은 계급적 위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경험적 지표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따른 상용직 등 내부자와 시간제, 기간제 등 외부자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적 내부자는 기존 제도와 시장 지위의 유지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불안정한 외부자는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Rueda, 2005; Häusermann & Schwander, 2012; Kang & Shin, 2022).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고용 형태 다양화, 낮은 조직률,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로 인해 고용 지위가 곧바로 일관된 복지 선호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다(Hong, 2016; Shin et al., 2025).

이 연구는 고용 유형을 단순히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대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이는 선행연구가 주로 임금근로자의 안정성 차이나 내부자-외부자 구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Kang & Shin, 2022),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등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경제활동 지위를 고려했다. 이를 통해 고용 유형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에서 독자적인 균열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소득 계층 및 정치 성향과 함께 고려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복지 태도는 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획득한 지위와 자원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수준은 상징적 위상과 문화적 자본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정보 접근성, 정책 이해 능력과 연결되며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elissen, 2000; Iversen & Soskice, 2001; Kim, 2013). 고학력자는 평등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복지 확대를 지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 노동시장 지위

와 높은 소득 가능성으로 인해 조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저학력자는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복지 제도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제도 신뢰의 차이로 인해 복지 확대 지지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Linos & West, 2003).

복지 태도는 사회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재분배와 국가 책임에 대한 ‘가치 판단’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 성향은 복지 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가치관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다. 복지 체제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정치 이념, 정부 신뢰, 연대 의식 등이 복지 태도에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Sears & Lau, 1983; Svallfors, 1997, 1999; Bean & Papadakis, 1998; Koster, 2008). 특히 한국처럼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이념과 정당 지지, 정부 신뢰, 정책 담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연구 역시 정치 성향이 복지 지출, 재분배, 증세,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Lee, 2009; Jang & Jung, 2021; Yang, 2022; Byun & Ko, 2023; Kim, 2024; Kang & Shin, 2024). 최근 조세 부담과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과 2024년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복지와 조세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관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 태도는 정당 지지 기반의 변화, 계층별 정치 참여의 차이, 저소득층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지 확대 지지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Jeon & Shin, 2014; Moon, 2017; Kwon & Han, 2018).

자기 이해 역시 복지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서구 사회의

2) 이 연구는 개별 조세정책에 대한 태도를 직접 분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정치 성향과 복지 태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보조적 맥락으로만 활용한다.

연구를 보면, 개인의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 실업, 돌봄 부담, 노후 위험 등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vallfors, 1997, 1999; Gelissen, 2000; Andreß & Heien, 2001).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 이해 요인이 항상 독립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제시되었다(Kim, 2013; Lee & Park, 2015; Ahn et al., 2021). 이는 한국의 복지 태도가 개인의 직접적 이해 관계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제도 경험, 정치적 해석, 사회적 신뢰, 계층 인식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기 이해 요인의 이론적 함의를 고려하지만, 분석 자료의 한계상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은 자기 이해를 직접 측정한 변수가 아니라,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포착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한국 복지 태도가 서구 계급 이론이 예측하는 방식과 달리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보여 왔다고 설명해 왔지만, 동시에 복지 정치의 확대, 불평등 심화, 자산과 조세 부담 논쟁, 정치적 가치관의 강화 속에서 계급적 요인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해 왔다. 이 연구는 소득 계층, 고용 유형, 학력,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의 주요 이론적 쟁점을 재검토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종속변수를 ‘복지 지출 확대 태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계급 요인인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 사회적 지위 요인인 학력, 가치관

요인인 정치 성향으로 구분했다. 연구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가설 1-1. 소득 계층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상위 소득집단은 하위 소득집단보다 복지 지출 확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고용 유형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2. 학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가설 2-1. 학력 수준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3. 정치 성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가설 3-1. 진보적 정치 성향일수록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득 계층, 고용 유형, 학력, 정치 성향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보이는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25년에 실시된 ‘제20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의 복지 인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대상은 9개 복지 지출 영역에 모두 응답하고, 경제활동 상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활·공공근로 참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며, 주요 변수에 결측이 없는 경제활동 참여자 1,605명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비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복지 태도가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자의 복지 지출 확대 태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복지 인식 부가조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장기적 변화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는 2025년 단일 시점에서 소득 계층, 고용 유형, 학력, 정치 성향과 복지 지출 확대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소득 계층은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하위 25%, 중간 50%, 상위 25%로 구분하여 계급적 위치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했다(Statistics Korea, 2016).³⁾ 고용 유형은 노동시장 지위와 고용 안정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했다.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교육 자원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치 성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가치관 요인으로 설정했다.

분석에서는 미가중 회귀분석을 주 분석으로 제시하고, ‘한국복지패널’의 표본설계를 고려하여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보조 회귀분석을 함께 실시했다. 이를 통해 미가중 분석 결과와 가중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층화 및 집락 정보를 반영한 복합표본 분산추정까지는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가중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3. 변수의 구성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이다.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교육, 주거 지원, 빈곤층 생활 지원, 노인 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 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실업 대책 및 고용보험

3) 통계청의 소득분위 통계는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 일정 비율로 집단화하는 방식에 기초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위 구분의 원리를 활용하되, 기존 ‘비계급성’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저소득층의 복지 지지 여부와 상위 소득집단의 복지 지출 확대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제1사분위수 미만을 하위 25%, 제1사분위수 이상 제3사분위수 미만을 중간 50%, 제3사분위수 이상을 상위 25%로 재구성했다.

등 9개 복지 지출 영역에 대한 응답을 활용했으며,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선택할 수 없음’을 결측 처리한 뒤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확대 지지 성향이 강하도록 변환했다. 이후 9개 항목의 평균값을 단일 지표로 산출했고(Kim & Seo, 2017),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3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계급 요인, 사회적 지위 요인, 가치관 요인으로 구성했다.

계급 요인은 가구 가처분소득(h20_din)을 사분위수 기준으로 재구성한 소득 3집단과 주요 경제활동 상태(h20_eco4)에 따른 고용 유형으로 측정했으며, 고용 유형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분했다. 사회적 지위 요인은 학력으로 측정했고, 대학원 이상 집단의 표본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했다. 가치관 요인은 정치적 성향(wc20_5aq6)을 활용하여 보수, 중도, 진보로 재구성했다.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로 구성했으며, 성별은 남성 더미 변수, 연령은 평균 중심화한 연속형 변수, 혼인 상태는 미혼을 기준 범주로 한 더미 변수로 투입했다.

4.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기술통계와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한 후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성별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다집단 변수에는 일원분산분석(ANOVA)과 셰페(Scheffé) 사후검정을 적용했다.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Model 1), 소득(Model 2), 고용 유형(Model 3), 학력(Model 4), 정치 성향(Model 5)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변수군별 설명력의 변화를 검토했다.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 잔차의 독립성은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으로 확인했다. 미가중 회귀분석을 주 분석으로 제시하고, 앞서 설명한 개인 가중치 적용 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결과의 안정성을 함께 검토했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분석 표본 및 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대상은 9개 복지 지출 영역에 모두 응답한 경제활동 참여자 1,605명이다. 종속변수는 각 항목을 역코딩한 후 평균값으로 산출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들은 단일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항목별 기술 통계는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은 남성 756명(47.1%), 여성 849명(52.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3.94세(SD=15.09)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 875명(54.5%), 대졸 이상 730명(45.5%)이었고, 정치 성향은 보수 377명(23.5%), 중도 717명(44.7%), 진보 511명(31.8%)이었다. 소득 계층과 고용 유형의 세부 분포는 이후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에 제시했다.

<표 1> 복지 지출 확대 태도 항목별 기술통계 (N = 1,605)⁴⁾

항목	M	SD	Range
건강보험 및 보건	3.293	0.734	1-5
국민연금·기초연금	3.129	0.789	1-5
교육	3.320	0.757	1-5
주거지원	3.297	0.780	1-5
빈곤층 생활지원	3.232	0.795	1-5
노인 생활 지원	3.320	0.738	1-5
장애인 생활 지원	3.411	0.735	1-5
아이 키우는 가족 지원	3.649	0.834	1-5
실업 대책·고용보험	2.983	0.834	1-5
9개 항목 평균 (종속변수)	3.293	0.478	1.00-5.00

4)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0.793. 원 척도(1=훨씬 더 많이 지출~5=훨씬 덜 지출)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9개 항목 모두 응답한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에 포함했다.

2. 변수 간 관계: 평균 차이 검증

복지 지출 확대 태도가 주요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다수 집단 변수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셰페 사후검정을 실시했다(〈표 2〉). 분석 결과, 성별, 연령대, 소득 계층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용 유형은 전체 F값이 유의했으나($F=2.622$, $p=.016$), 셰페 사후검정에서는 개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급 가족 종사자($M=3.137$)와 고용주($M=3.198$)는 상용직($M=3.304$)보다 평균값이 낮았으나, 표본 규모가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M=3.319$)이 고졸 이하 집단($M=3.271$)보다 복지 지지 수준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미약했다($t=-1.968$, $p=.049$). 반면 정치 성향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뚜렷했으며($F=22.301$, $p<.001$), 진보($M=3.399$), 중도($M=3.269$), 보수($M=3.193$) 집단 간 모든 쌍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집단 간 복지 지출 확대 태도 평균 차이 검증 (N=1,605)

구분	집단	N	M	SD	F / t	Scheffé 사후검정
성별	남자	756	3.313	0.511	$t=1.610$	n.s.
	여자	849	3.274	0.445		
연령대	20대 이하	183	3.297	0.416	$F=0.815$	n.s.
	30대	84	3.284	0.600		
	40대	275	3.310	0.464		
	50대	445	3.319	0.554		
	60대	358	3.274	0.436		
	70대 이상	260	3.253	0.395		
소득 3집단	하위 25%	305	3.339	0.424	$F=1.814$	n.s.

〈표 2〉 계속

구분	집단	N	M	SD	F / t	Scheffé 사후검정
소득 3집단	중간 50%	841	3.284	0.470	F=1.814	n.s.
	상위 25%	459	3.278	0.521		
경제 활동	상용직	583	3.304	0.489	F=2.622*	전체 F는 유의하나 개별 쌍 비교에서 유의 차이 없음
	임시직	458	3.332	0.489		
	일용직	91	3.295	0.497		
	자활·공공근로	92	3.306	0.363		
	고용주	32	3.198	0.523		
	자영업자	264	3.253	0.465		
	무급 가족 종사자	85	3.137	0.411		
학력	고졸 이하	875	3.271	0.443	t=-1.968*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730	3.319	0.515		
정치 성향	보수	377	3.193	0.446	F=22.301***	진보>중도>보수
	중도	717	3.269	0.483		
	진보	511	3.399	0.473		

* $p<.05$, ** $p<.01$, *** $p<.001$. n.s.=not significant.

3. 위계적 회귀분석

평균 차이 검증은 이변량 관계에 한정되므로, 각 요인의 독립적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회귀분석(OLS)을 실시했다. 모형에는 통제변수(Model 1), 소득(Model 2), 고용 유형(Model 3), 학력(Model 4), 정치 성향(Model 5)을 단계적으로 투입했다.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IF)로 점검했고, 연령은 평균 중심화했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했다.

〈표 3〉 복지 지출 확대 태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β)⁵⁾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성별(남자=1)	+.046	+.051*	+.048	+.043	+.044
연령(중심화)	-.016	-.046	-.014	+.001	+.021
유배우	-.039	-.006	-.006	-.006	-.010
사별	-.014	-.010	-.018	-.018	-.031
이혼	+.027	+.033	+.027	+.028	+.020
별거	-.026	-.023	-.026	-.026	-.018
소득 중간 50%	-	-.074*	-.079*	-.078*	-.076*
소득 상위 25%	-	-.076	-.081*	-.089*	-.096*
임시직	-	-	+.027	+.031	+.038
일용직	-	-	-.015	-.008	-.007
자활·공공근로	-	-	-.006	-.001	+.008
고용주	-	-	-.033	-.030	-.028
자영업자	-	-	-.047	-.036	-.033
무급 가족 종사자	-	-	-.073*	-.067*	-.064*
대졸 이상(2분류)	-	-	-	+.045	+.041
정치 중도	-	-	-	-	+.084**
정치 진보	-	-	-	-	+.203***
R ²	.006	.009	.017	.019	.045
Adj. R ²	.002	.004	.009	.009	.035
ΔR^2	-	+.003	+.009*	+.002	+.026***
F	1.551	1.724	1.991*	2.016*	4.400***

기준범주: 여성, 미혼, 소득 하위 25%, 상용직, 고졸 이하, 보수.

Durbin-Watson=1.706, 최대 VIF=6.92. * $p<.05$, ** $p<.01$, *** $p<.001$.

5) N=1,605.

1) 모형의 설명력과 변수군별 기여

모형의 설명력은 Model 1의 $R^2=.006$ 에서 최종 모형인 Model 5의 $R^2=.045$ 로 증가했다. 정치 성향을 투입한 Model 5에서 설명력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Delta R^2=.026$, $p<.001$), 고용 유형을 투입한 Model 3에서도 설명력 증가가 나타났다($\Delta R^2=.009$, $p<.05$). 다만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제한적이므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 성향은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군 가운데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인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2) 계층 요인: 소득과 고용 유형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계층의 관련성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소득 하위 25% 집단은 기준 범주로 설정되었으므로, 이 집단의 복지 지출 확대 지지는 중간 50%와 상위 25% 집단의 차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차이 검증에서는 하위 25%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득 계층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814$, n.s.). 따라서 하위층의 복지 확대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간 50% 집단은 미가중 최종 모형에서 하위 25% 집단보다 복지 지출 확대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beta=-.076$, $p=.042$). 그러나 가중치 적용 후에는 이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중간층의 복지 태도가 하위층과 일관되게 구분되는 안정적인 차이이기보다, 일부 모형에서 약하게 관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위 25% 집단은 미가중 최종 모형에서 하위 25% 집단보다 복지 지출 확대 지지가 낮았으며($\beta=-.096$, $p=.015$), 가중치 적용 후에도 그 차이가 유지되었다. 특히 정치 성향을 포함한 최종 모형에서 상위 25% 집단의 계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상위 소득집단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낮은 지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비계급성’ 논의와 관련하여 다층적, 복합적 해석이 필요하다. 하위층의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강한 지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위층에서는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강한 ‘계급화’의 증거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기존 ‘비계급성’ 논의 속에서도 상위 소득 계층의 태도에서는 ‘계급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유형에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급 가족 종사자만 상용직보다 낮은 복지 지지 수준을 보였으나($\beta = -.064, p = .024$),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 집단이 동질적인 복지 선호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용 지위와 복지 태도의 관계가 비정규직 내부의 이질성, 조직화 수준 및 정치적 대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ueda, 2005; Kang & Shin, 2022; Shin et al., 2025). 특히 고용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 집단은 표본 수가 각각 32명과 85명으로 작아 추정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급 가족 종사자 집단에서 나타난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지위 요인: 학력

평균 차이 검증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의 복지 지지 수준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으나($M = 3.319$ vs. $3.271, p = .049$), 다른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41, p = .162$). 이에 따라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이는 교육 변인이 복지 태도에 대해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본 선행연구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이다(Kim, 2013).

4) 가치관 요인: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보수 집단과 비교할 때 중도($\beta=.084$, $p=.008$)와 진보($\beta=.203$, $p<.001$)는 모두 복지 지출 확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 성향의 표준화 계수는 최종 모형에서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이는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Svallfors, 1997; Lee, 2009).

4. 가중치 적용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 안정성 검토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설계를 고려하여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다(표 4)). 미가중 분석을 주 분석으로 제시하고, 가중 분석은 주요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분석으로 활용했다. 가중치 적용 후에도 진보($\beta=.203 \rightarrow .281$), 중도($\beta=.084 \rightarrow .117$), 소득 상위 25%($\beta=-.096 \rightarrow -.100$)의 관련성은 유지되었다. 반면 소득 중간 50%와 무급 가족 종사자는 가중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임시직과 성별은 가중 분석에서만 유의했다. 학력은 미가중 분석과 가중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치 성향과 소득 상위 집단의 관련성은 미가중 분석과 가중 분석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 유형과 학력은 일부 모형에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가중치 적용 후에는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복지 태도가 고용 지위에 따른 단선적 균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소득 계층과 정치적 가치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Lee, 2009; Shin, 2013; Lee & Kim, 2013; Kim, 2018; Jang & Jung, 2021).

〈표 4〉 미가중과 가중치 적용 회귀분석 결과 비교 (Model 5, N=1,605)⁶⁾

변수	미가중 β	미가중 p	가중 β	가중 p
성별(남자=1)	+.044	.101	+.080	.004**
소득 중간 50%	-.076*	.042	-.063	.124
소득 상위 25%	-.096*	.015	-.100*	.016
임시직	+.038	.189	+.064*	.023
고용주	-.028	.258	-.009	.722
자영업자	-.033	.260	-.004	.901
무급 가족 종사자	-.064*	.024	-.052	.183
대출 이상(2분류)	+.041	.162	+.053	.071
정치 중도	+.084**	.008	+.117***	.001
정치 진보	+.203***	<.001	+.281***	<.001
R ²	.045		.065	

* $p<.05$, ** $p<.01$, *** $p<.001$.

V. 결론

이 연구는 불평등, 고용 불안, 조세 부담, 국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복지 태도의 형성 요인을 최근 자료를 통해 재검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의 주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나타났다. 상위층은 강한 부정적 복지 태도를 보인 반면, 하위층과 중간층은 긍정적 복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상위층은 계급적 성향이 강해진 반면, 하위층은 계급적 성향

6) 주요 독립변수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연령과 혼인 상태 등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는 표에서 제외했다.

이 약해졌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불안, 돌봄 부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음에도, 복지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소득 계층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복지 태도의 ‘비계급성’ 또는 ‘재계급화’로 단정할 수 없고, 기존 ‘비계급성’ 논의 속에서도 소득 계층에 따라 복지 태도의 변화가 다층적,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용 유형과 학력은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복지 태도를 고용 유형이나 학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소득 계층 및 정치 성향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 위험이 다층화된 상황에서도 고용 유형 자체가 일관된 복지 태도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노동시장 지위와 복지 태도의 관계가 단순한 내부자-외부자 구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Kim & Seo, 2014; Kang & Shin, 2022).

셋째, 정치 성향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보수 집단과 비교할 때 중도와 진보 모두 복지 지출 확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 성향의 표준화 계수는 최종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중치 적용 후에도 정치 성향의 관련성은 유지되었다. 이는 복지 지출 확대 태도가 소득이나 고용 유형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뿐 아니라 국가 책임, 재분배, 조세 부담, 사회적 연대에 대한 정치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Lee, 2009). 최근 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재정 지속가능성, 조세 형평성, 수혜 대상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에서 나타난 정치 성향과 복지 태도의 일관된 관련성은 복지 태도의 높은 정치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Jang & Jung, 2021; Yang, 2022).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 그대로 동일

한 결과는 아니다. 하위 소득집단의 높은 복지 지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복지 태도의 ‘비계급성’ 명제를 다시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소득집단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상위층의 계급화를 보여준다(Kim & Seo, 2017). 이 가운데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 지출 확대 태도는 단순한 계층 갈등이라기보다 조세와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의 문제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정당 엘리트의 사회적 기반과 당원과 정치 고관여층의 계급적 성격의 변화가 정당의 정치 전략과 선거 공약의 선택뿐 아니라 대중의 복지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위 소득집단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확인된 만큼, 복지 확대 논의는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집단에게 재원 조달 방식과 부담 배분의 기준,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유형과 학력이 복지 지출 확대 태도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특정 고용 지위나 교육 수준만으로 복지 정책의 수용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기획할 때에는 고용 형태나 학력이라는 단일 기준보다 소득 계층, 제도 경험, 조세 부담 인식, 정치 성향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 성향이 복지 태도와 가장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복지 정책의 수용성이 제도 내용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주요 정당의 보수화,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중심의 정치 엘리트의 충원, 중간 소득 계층과 자산 보유층 중심 정당의 사회적 기반 재편 등을 고려하면, 향후 복지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특정 이념 진영의 의제가 아니라, 중간층의 재정 부담 인식과 저소득층의 실질적 필요를 함께 고려

하는 복지 제도 개혁을 사회적 합의의 의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한계점도 있다. 첫째, 2025년 단일 시점 횡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복지 태도의 변화 과정이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계급성’ 또는 ‘재계급화’라는 장기적 변화 과정을 검증했다기보다, 최근 자료에서 소득 계층별 차이가 일부 관찰되는지를 확인한 연구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 수급 경험, 제도 이용 여부, 질병·실업·돌봄 부담 등 직접적 자기 이해 변수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 셋째, 고용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 일부 고용 유형 집단의 표본 수가 적어 추정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복지 인식 부가조사’의 여러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계층별 복지 태도의 변화가 실제로 강화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9개 복지 영역에 대한 지출 확대 태도를 단일 합산 지표로 분석했으므로, 향후 연구는 복지 정책을 소득보장형, 재분배·안전망형, 사회투자형 등으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도 있다(Häusermann, 2018). 또한 복지 지출 영역을 세분화해 복지 수급 경험, 조세 부담 인식, 제도 신뢰, 정치적 대표성, 돌봄 부담, 가구 구성, 주거 형태 등 변수를 포함하면 복지 태도의 형성 구조를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이기에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n, S. H., Kim, Y. M., & Kim, S. W. (2021). Welfare attitudes of Korean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cleavage structur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1), 42-71.
- Andreß, H.,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4), 337-356.
- Bean, C., & Papadakis, E.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211-236.
- Byun, Y. J., & Ko, G. G. (2023).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A focus on perceptions of current and future inequality level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3(4), 309-327.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lissen, J. (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s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4), 285-300.
-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In P. Emmenegger, S. Häusermann, B. Palier, & M.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

- trializing societies* (pp. 27-51). Oxford University Press.
- Häusermann, S. (2018). Welfare state politics under pressure: Identifying priorities, trade-offs, and reform opportunities among citizens, political elites and stakeholders.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4(3), 268-301.
- Hong, S. B. (2016). Union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politics of intimacy: A case study of three in-house subcontracting branches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22(1), 139-185.
- Iversen, T., & Soskice, D.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3.
- Jang, H. D., & Jung, M. H. (2021). The effects of political orientation on welfare attitudes.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21(2), 93-100.
- Jeon, B. Y., & Shin, J. U. (2014). Do lower-income groups support conservative parties? Party support and policy attitudes by social stratum in Korea, 2003-2012.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91, 9-51.
- Kang, J. Y., & Shin, E. J. (2022). Labor market risks differenti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33(4), 89-109.
- Kang, M. J., & Shin, Y. H. (2024). The effects of income tax rate structure and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on the evaluation of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ies. *Tax and Accounting Review*, 13(3), 89-124.
- Kim, D. G. (2018). *A history of Korean welfare capitalism: The formation and crisis of asset-based livelihood secur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H. J. (2013). The effects of class and stratum o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0(2), 35-68.
- Kim, J. H. (2023). A study on the typology of welfare attitudes and the consistency between responses on welfare spending and tax increas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7(4), 95-139.
- Kim, S. Y. (202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Focusing on welfare attitud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0(3), 227-231.
- Kim, Y. S., & Yeo, Y. J. (2011). Welfare attitudes of Korean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non-class character and inconsistency. *Economy and Society*, 91, 211-241.
- Kim, Y. S., & Yeo, Y. J. (2015). What kind of welfare state does the Korean middle class wan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9(4), 335-362.
- Kim, Y. T., Yoo, S. H., & Lee, H. H. (2013).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Revaluation of the end of class politic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5, 183-212. <https://doi.org/10.17790/kors.2013..45.183>
- Kim, Y. T., & Seo, J. U. (2014). Welfare attitudes and welfare institutions in Korea: Attitude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oward individual welfare programs.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90, 331-378.
- Kim, Y. T., & Seo, J. U. (2017). Welfare attitudes and the

-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s: Effects by income level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3(4), 31-56.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Koster, F. (2008). The effects of social and political openness on the welfare state in 18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4), 291-300.
- Kwon, H. Y., & Han, S. B. (2018). Inequality in income and voter turnout: The case of Korea, 2003-2014.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4(2), 61-84.
- Lee, H. G., & Park, Y. J. (2015). The effects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on welfare perceptions.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48, 362-397.
- Lee, J. S.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consciousness among Koreans. *Social Welfare Policy*, 30(4), 73-99.
- Lee, S. R., & Kim, H. G. (2013). Generations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n society: An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and generational effects. *Social Science Research*, 29(3), 433-458.
- Linos, K., & West, M. (2003). Self-interest, social beliefs,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4), 393-409.
- Moon, W. J. (2017). The deactivation of income-based voting in Korea: A theoretical model and an empirical analysi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4), 101-122.
- OECD. (2012). *Better skills, better jobs, better lives: A strategic approach to skills policie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177338-en>

- Rehm, P., Hacker, J. S., & Schlesinger, M. (2012). Insecure alliances: Risk, inequality,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2), 386-406.
-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 Sears, D. O., & Lau, R. R. (1983). Inducing apparently self-interested political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223-252.
- Shin, G. Y. (2013). *A study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Humanitas.
- Shin, Y. M., Jeon, B. Y., & Kang, U. Y. (2025).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union presence and union density on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non-regular worker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5(3), 1-32.
- Statistics Korea. (2016, November 29). *What do income quintiles or deciles mean?* https://sri.kostat.go.kr/board.es?act=view&bid=3214&list_no=161850&mid=a10502040100&nPage=1&ref_bid=3213%2C3215%2C3214%2C11862%2C11863 (Accessed 2026-08-05).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 Svallfors, S. (1999).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2(1), 1-23.
- Yang, J. M. (2022). How is the level of private asset accumulation related to the structure of welfare perceptions? Focusing on attitudes toward the insurance function,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2), 65-89.

Yoon, M. J., & Lim, J. J. (2024). Perceptions of types of fairness in Korean society and welfare attitude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14(2), 83-112.

Yoon, S. Y., Hong, J. E., & Kim, B. M. (2019). Comparison of welfare attitudes across generations: Moderating effect of age and income level. *GRI Review*, 21(1), 1-24.

(논문 접수: 2026.06.15. / 수정본 접수: 2026.07.03. / 게재 승인: 2026.07.10.)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A Reexamination of Class, Employment, and Political Orientation

Ju Ho Lee, Korea University

Yun Tae Kim,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economically active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expanding welfare spending are associated with class,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and political orientation, using data from the supplementary survey on welfare perceptions in the 2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25).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economically active respondents who answered all nine welfare spending items, and a supplementary regression analysis applying individual weights was also perform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pper-income group showed relatively lower support for expanding welfare spending, whereas strong support among the lower-income group was not clearly observed. Second, employment type and education level showed only limited associations with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expansion. Third, political orientation showed the most consistent association among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lfare attitudes in Korea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evidence of a full-scale "re-classing" of welfare attitudes. Rather, they indicate that income-related factors may operate in more complex and dynamic ways within the existing discussion of the "non-class" character of welfare attitudes. At the same time, the consistent association between political orientation and welfare attitudes can be understood as evidence of the strongly political character of welfare attitudes. Therefore, welfare policy should not be perceived merely as the agenda of a particular ideological camp. Instead, policy goals, fiscal prospects, target groups, and expected effects should be

presented transparently in order to build social consensus beyond partisan interests.

Keywords: Welfare Attitudes, Class,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Political Orientation, Welfare State